

□ 정부시책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회계규정 마련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체결시 준용할 회계규정(산업자원부 예규)을 제정하여 '98. 8.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배분계약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에너지사용자와 배분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이다.

동 계약방식은 70년대 미국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벤처형 투자사업으로 '92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시설투자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은 성과배분계약제도는 에너지진단, 사후관리 등 용역과 시설공사가 복합된 계약상의 특성으로 인해 용역사업과 시설공사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이 어려웠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과 공사를 구분하고 성과배분계

약에 관해 특별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담당 공무원이 성과배분계약 체결에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공공부분 성과배분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관련규정 정비가 선결과제로 보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회계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적성격 및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용역계약으로 인정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의 원가산정기준」: 용역과 공사적 성격이 병존하는 성과배분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 진단비, 시설설치비, 사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총원가로 계산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적격업체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등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금번 회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성과배분계약 방식에 의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대책마련

중소기업청은 극심한 자금난과 내수판매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내수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유명인증마크 획득때 비용·기술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 중기청은 우선 반월공단, 남동공단 등 전국 20개 산업단지공단에서 전국 3천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11월에 무역·투자실무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이미 수출보육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1천개사와 내수 중심의 기타 중소기업 2천개사 등이다.

▶ 수출기업 마케팅능력 확충 = 해외시장 개척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국의 UL마크, EU의 CE마크 등 해외 유명 인증마크의 획득 지원을 위해 9월부터 500개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유명인증규격획득 비용은 인증마크 1개당 평균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업체당 700~800만원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25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인증마크 획득지원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과 11월중 3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국제전시회 참여비용의 50%, 해외시장개척단 및 투자촉진단 참가시 공통경비(부스비용·차량임차비·선전비·통역비 등)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국제업무에 서툰 수출 벤처기업이 수출계약, 기술제휴계약 등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도 적극 검토중이다.

▶ 구조개선자금 우대 = 올 하반기 추가로 조성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시설자금과 함께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비중도 종전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시설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근 3년 이내에 시설투자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들의 수출은 지난 6월까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7월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기기기, WTO 정부 조달협정 활용근요

지난해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정은 비금속 광물제품과 철강의 수입촉진을 유발하는 대신 통신 및 음향기기·전기기기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이란 보고서에서 " '97년 1월 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배려속에서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돼 비경쟁적이던 시장에까지 국제경쟁 요소가 도입됐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자체 조달능력,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 정부 조달시장의 투명성 등을 높이고 선진국 중심으로 독과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조달시장에서의 주요 4대 업종 중에서 비금속 광물제품·철강 및 철강제품의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으로 부터 수입 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잠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주요 4대 업종 이외에도 중간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가운데 합성수지·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과 비철금속 및 동제품·원동기 등도 시장잠식이 상당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 및 음향기기·전기기기 분야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수출특화 업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국내시장의 잠식이 있겠지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크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경쟁력을 높여 조달시장의 개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